

4월 7일

[Rural]

1. 새로운 비도시지역 개발 모델 (Modern Rural Development Policies)

발제 (비도시작업반 의장)

- 규모와 특성이 상이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 비도시(Rural)은 기존의 정의에서처럼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아니라 도시배후지를 포함한 도시권 사이를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이해해야 함.
- 비도시지역정책의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책적 연계가 필요함

(캐나다) 비도시지역을 새로이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비도시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도시-비도시 연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2. 비도시지역의 재정의 (Redefining Rural)

발제 (David Freshwater, 칠레 비도시지역 리뷰 발표)

- 비도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이 필요. 현재는 전체 중 뒤쳐져 있는 지역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 비도시의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이 필요
- 비도시의 산업(농업, 농산물가공, 어업, 양식업, 임업 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할 필요
- 비도시권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취약함.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비도시권 정책에 있어 매우 가난한 지역과 기업의 입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지역의 양극화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TDPC에서 새로운 비도시 정책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고) 이러한 비도시 지역에 대한 관심에 의해 사회적 불균형(inequality)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역별 뿐 아니라 산업별 분석도 필요함

(EU) 정부에서 제시하는 비도시권 성장방향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비도시지역의 문제와 회복력(Challenges and Resilience of Rural Regions)

발제 (Hugo Martinez: 캐나다 사례 발표)

- 규모가 작은 노동시장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에도 외부의 대규모 노동시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 가능.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 필요.
- 근접정보다는 지역계층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지역의 유사성이 결정됨
- 지역의 규모에 따라 지역 총생산은 차이가 크더라도 노동자 1인당 GDP는 지역간 차이가

별로 없음. 따라서 생산성은 지역의 규모에 좌우되지 않음

- (정책 시사점1) agglomeration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아님. 경제성장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성장을 이루어야 함.

- (정책 시사점2) 다양한 규모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패키지를 각각 개발할 필요

(핀란드) 현재 핀란드의 도시-비도시 정의는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더욱 조밀한 공간데이터 단위로 이루어짐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 중심지와 연계성을 고려한 인구 트렌드, 2) 고용과 경제적 활동, 3) 지역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 구분

(캐나다) 독자적으로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일본) 일본은 섬과 반도가 많아 교통으로 연계하기 힘들며 이러한 지역에도 6-7백만명이 살고 있어 도시부와의 연결성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오스트리아) 국가간, 지역간 비교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며, 목적별로 다양한 지수 개발이 필요

(EU) 각국의 데이터와 통계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며, 다른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수의 개발 필요

[Urban & Rural Joint]

4. 토지이용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 (The governance of land-use policies)

발제 (David Freshwater 외)

- 도시의 비도시지역으로의 확장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함
- 본 주제에 대해 "Land use and the transformation to a low-carbon economy"라는 제목으로 연구가 제안되었음
- 토지이용 변화에 있어서는 Property tax(토지, 건물)와 토지이용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고려됨

(EU) 도시지역 토지세와 비도시, 농업 지역 토지세의 차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이용해 토지이용을 조정하는 방법 모색 필요. 이 과정에서 도시의 확장 등 토지이용 변화가 일어나는 형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도시작업반) 언급된 세금-토지이용의 관계를 이용해서 토지이용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틀

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 기존의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등 분야별 계획을 고려한 통합된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는 매년 토지피복 촬영을 통해 변화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EU의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스위스) 도시의 팽창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본 연구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은 약속할 수 없지만, 데이터 및 정보 제공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임.

(미국) 샌디 허리케인 등의 사례에서 해안 지역의 토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5. 고령화 사회의 도시(Cities in Ageing Societies)

발제 (세츠코 사야: OECD 국가의 지역에 대한 고령화 리포트 발표)

- 고령화는 도시부와 비도시부 양쪽 모두에서 문제지만 그 양상은 다름. 본 보고서는 지역정부(municipality government)의 시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의 시점에는 도시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장관급 회의에서 회복력(resilience)과 포괄적 성장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고령 인구도 단일 그룹이 아니며(은퇴여부, 소득 등의 영향), 인구 구성의 동적인 변화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마다 고령화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적절한 정책이 필요

(의장) 고령그룹을 일률적인 연령에 의해 구분하는 것보다 은퇴여부, 연금 지급 여부, 지역(국가)의 생활수준 등의 구체적인 지표의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있을 수 있음. 국가별 연령 분포 등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EU) 고령화에 있어 국가적 이슈와 지역적 이슈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 인구의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빈곤문제와 다른 변수를 사용해야 함(예: 재산은 있으나 소득은 적은 고령인구 등)

(CoR) 고령인구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고령화 대책이 필요

(일본)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분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의장) 고령화의 문제는 비도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며, 비도시지역으로의 이민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6.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Resource-rich regions: distance and density)

발제 (Secretariat의 사례발표)

- 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곳에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
- (이러한 지역의 특징) 1) 낮은 수준의 인적 자원, 2) 인구 유출의 문제, 3) 인구 저밀에 의한 낮은 산업 경쟁력 및 창업 취약성 4) 외부의 시장으로 연결이 어려움, 5) 특정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취약
- (정책적 시사점) 1)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야 함, 2) 창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3) 재정, 경쟁, 접근성, 규제 등에 존재하는 병목을 해소할 필요 등

(캐나다) 창업 및 새로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각 비도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개별 산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다가 어느 선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새로운 창업이 중요함.

(EU) 자원채굴 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 자연 자원은 채굴되어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원을 빠른 속도로 채굴할 수 있다는 의미뿐임. 경제 성장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긴 하지만 경쟁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님. 핀란드의 경우 국가의 많은 부분이 규모가 큰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 지역의 창조적인 생산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있음. 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 대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절대적인 장애는 아님.

(Secretariat) 이러한 지역에서는 자연자원(기업)이 지역 경제를 독점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나,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있음.

4월 8일

7. 마르세이유 장관급 회의 결과물 논의

요약발표 (의장 및 OECD 측)

- 참석률도 높고 좋은 논의가 오간 성공적인 회의였으며, OECD의 공적투자를 위한 3가지 원칙이 많은 지지를 얻었음
-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짐.
- 기타 중요한 논점: 일자리 창출, 지역 회복력(resilience), 혁신(innovation), 도시-비도시 연계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역할
- 일본이 의장을 맡는 장관급 회의가 있을 예정(<http://www.oecd.org/mcm/>, 2014년 5월 5-6일, Resilient Economies and Inclusive Societies: Empowering people for jobs and growth)이며, 일자리 창출과 resilience, 동남아의 도시화에 대한 주제 논의 예정

(지표작업반) 근거에 입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이유로 지표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툴박스를 만들려고 노력중.

(도시작업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메트로폴리탄의 잠재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정부가 분절되어 있다면 지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중복업무, 불필요한 업무 등을 없애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비도시작업반) 도시-비도시간에는 강한 상호관계가 있어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며,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 필요함.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뒤쳐진 지역에 대한 보조로서의 지원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8. 지역전망 (Regional Outlook)

발제 (Secretariat)

- 같은 규모의 도시에서도 생산성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agglomeration이 생산성 향상에 절대적인 변인은 아님
- 평균적으로는 인구가 2배가 될 때 2~5% 생산성 향상이 있음.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agglomeration의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지역 성장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야별/정부단계별 정책이 유기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향해 조율될 필요가 있음

(프랑스) 지방정부의 분절이라는 문제를 절감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해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임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이미 지역 맞춤형 개발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OECD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합형 정책이 실제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세츠코 사야) 스웨덴의 통합형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많은 곳에서 통합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찾을 수 있음

4월 9일

9. 콜롬비아의 OECD 가입

가입절차 설명 및 콜롬비아가 당면한 문제점 제시(Secretariat 및 OECD측)

- 콜롬비아는 OECD의 23개 커미티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답해야 하며 답변서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콜롬비아의 가입을 승인
- 콜롬비아는 OECD가 요구하는 법률적 수정사항 및 OECD의 추천 사례에 준하는 개선을 마련해야 함
- 현재 콜롬비아는 소득불균형과 사회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공간정보의 활용 및 지역특성조사에 의한 지역의 구분이 부족하며, 자원, 산업, 국제화 전략이 국토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짐
-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낮음

(캐나다) 콜롬비아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함께 다양한 강점 또한 가지고 있음. 통계관련 기관에서 데이터를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온라인 데이터 배포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영국) 마약유통의 거점이었던 콜롬비아를 도시, 사회적 개혁을 통해 현재의 상태로 개선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 칠레와 멕시코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데, 콜롬비아가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멕시코) 콜롬비아의 가입을 지지하며, 콜롬비아는 보고타 등 도시 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바 있어 OECD 국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

(OECD) 콜롬비아의 가입 승인에 있어서는 OECD 회원국으로서의 동질감, 동일한 방향성 공유가 중요.

10. TDPC와 작업반의 향후 추진업무에 대한 논의

발제 (의장 및 OECD측)

-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한 통계치가 아니라 지식(knowledge)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함.
-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장관급 회의에서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OECD와 각국의 지방 정부와 연계를 추진하여 지역 정책에 OECD의 작업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웰빙에 대해서는 국가단위 보다는 지역단위 혹은 그 하위 단위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정책에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함.
- 이전의 지표작업반 업무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진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11. 지역정책을 위한 비도시의 재정의(Revising rural typology to support regional policy)

발제 (작업반 의장 등 OECD측)

- 인구밀도만 이용한 도시-비도시 구분은 오류가 많아 접근성을 고려한 분류법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행정구역단위에 의한 도시-비도시 분류가 아니라 격자형태의 분석단위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됨 (행정구역 크기의 차이, 행정구역 내 인구분포의 불균질성 등의 이유)
- 현재 EU 국가에서는 위의 내용이 추진 중이며, 비 EU국가에서도 유사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려 필요.

(캐나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분류 방법론에 따라 비도시의 정의는 달라지며, 한 나라의 비도시의 정의가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간단한 정의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지 않을 것임.

(스위스) 한 가지 도시-비도시 구분법이 모든 정책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목적별로 구분법을 개발해야 함. 지역의 기능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므로 기능에 의한 분류는 시간이 흐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일본) 일본에서도 한 가지 구분법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 몇 가지 구분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탈리아, 캐나다) 비도시의 정의의 및 도시-비도시의 구분이라는 주제는 본 회의 내에 결론 낼 수 없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야 함.

(의장 등 OECD측) 본 논의에서 언급된 새로운 데이터,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각국에 배포할 예정이니 정해진 시간 내에 피드백을 해주기 바람. 유럽에서는 행정구역별 데이터가 아니라 그리드 데이터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도 가능성을 알려주기 바람. 본 회의의 논의 결과, 한가지의 분류법이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분류법 개발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작업완료기한을 정할 예정.